

공 개



의안번호	제 56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2. 19. (제 3 차)

의
결
사
항

(주)씨비파이낸셜솔루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2. 19.

1. 의결주문

(주)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씨비파이낸셜솔루션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지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주)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류를 통하여 심사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 결과,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주)씨비파이낸셜솔루션에 대해 지정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나.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필(2020.2.14.)

(별지)

(주)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주)씨비파이낸셜솔루션

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범위

- (금융서비스 종류) 기타
- (주요 내용)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5천만원) 내에서 정기예금 상품을 추천

3.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

- (이용자 범위) 금융소비자
- (업무 대상) 정기예금 비교플랫폼 제공

4.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 한도(5천만원) 내에서 정기예금 상품을 추천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 제1항

6. 부가조건

- **(금융거래정보 활용제한)** 정기예금 계좌개설시 실제 실지명의 확인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수행하고,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동 서비스에 의해 수집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범위는 제휴된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 추천으로 제한
- **(고객정보 수집·저장 제한)** 신청인은 고객으로부터 정기예금 상품 조합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받은 때에만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신청인이 임의의 시점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고객에게 추천을 완료한 이후에는 즉시 당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삭제할 것
 - 또한,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고객식별정보 등)를 해당 금융회사에 전달한 이후에는 즉시 삭제할 것
- **(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신청사가 수집·이용·제공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서비스 지정기간 중 금융거래정보 등의 보호 방안과 정보 활용 후 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정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및 처리방안의 안전성 및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서비스를 실시할 것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시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계좌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 20영업일 내 개설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고,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 20영업일 내에 2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사기이용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해당 금융회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거나 약관에 반영할 것

* 동일인이 단기간(20영업일)내 2개 이상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시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고 거래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감독행정

- (소비자 보호방안) 서비스 지정기간 중 소비자 보호방안(분쟁해결방안, 배상방안 등), 서비스 범위, 서비스 지정기간 종료 후 소비자 보호 방안, 소비자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 및 업무분장 등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서비스 지정 후 2개월 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서비스를 실시할 것
- (보안성 검토) 신청인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금융보안원에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서비스 실시 전 그 결과를 제출할 것
- (서비스 운영능력) 금융거래정보등을 활용하여 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출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고 후 서비스 실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6개월 간 혁신금융지정 서비스의 개발상황 및 출시가능성 등을 금감원에 보고할 것(지정 후 6개월 이내)
 - 혁신금융서비스 실시 전 금융회사와의 계약체결 상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한 후 금감원 결정에 따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것

7. 지정일 : 2020. 2. 19.

8.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관 계 법 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
2.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②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4.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한다.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 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 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

(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 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자금세탁방지실
연 락 처	02-2100-2950	02-3145-7500